



「역동의 한국 로드맵」

실천이 열쇠다 (下)



金仲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그러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과 제는 무엇인가?

첫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나, IT 벤처 버블시기에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과도한 투자로 부실화된 중소기업이 다수 있다. 이들을 구조조정 함으로써 혁신지향적 중소기업을 위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회생가능한 기업을 식별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은 전직 및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2003년에 6.2%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고용을 흡수할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능동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해외의 혁신자원을 흡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촉진을 위한 내부 제도개혁의 추동력을 확충하는 첩경이다. 특히 낙후도가 심한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계 부품 산업 등 전략산업분야를 위주로 FDI를 유치하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술, 산업, 인력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미래 기술부문과 현재 경쟁우위 부문에 대한 지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R&D 지출의 성과관리 및 평가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기술인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직업훈련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넷째,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개별 규제중심의 부분적 개선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덩어리 규제에 대한 총체적 정비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대표되는 단기 거시경제 정책은 이와 같은 성장 잠재력 정책과 상충하나?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경기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의 진폭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에,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배양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의 활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진지한 대응 없이 재정책대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된 1990년대의 일본, 1차 석유파동기에 인플레이션 보다 경기확장에 주력한 통화정책의 결과 궁극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아픔을 겪었던 선진국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 중 경기부양 정책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IT관련 분야의 호조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건설투자가 하강국면에 놓여 있고, 내수부진의 지속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요구된다는 점은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과거와 같이

규제완화를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단기적 부양책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이 거래되고 있

다. 그 중 불과 5%만 무역거래를 결제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95%는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기회를 찾아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이 중에는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본도 있을 것이다. 이렇기에 우리는 눈을 밖으로 돌려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야만 한다.

전 세계 생산량의 30%, 무역거래량의 66%를 다국적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선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나, IT 벤처 버블시기에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과도한 투자로 부실화된 중소기업이 다수 있다. 이들을 구조조정 함으로써



기술 이전의 80%도 다국적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국내경제의 국제화를 토대로 다국적기업의 유치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한국적 또는 한국특유의 규제나 정책은 이러한 추세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발전전략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나?

구체적으로, 시장의 개방, 각종 제도의 국제규범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세 과제이다. 생산성 증대라는 추상적 과제의 현실적 접근방안이 바로 이 세 과제를 성취하는 것이다. 우선, 시장개방은, 비록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의 첩경이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닌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그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경우,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

해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그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데 그 핵심은 각종 제도를 국제규범에 상응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경제와 사회를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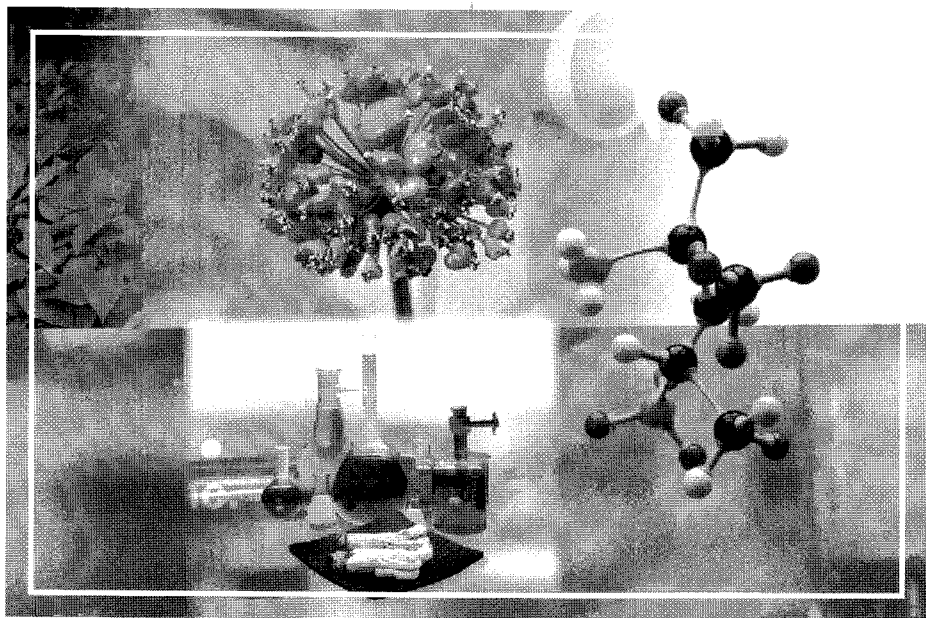
시각에 따라 사람마다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경제가 국제 분업체제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경제보다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국제규범을 개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제도의 효율성을 통하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으며, 또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선결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말할 나위 없이, 이러한 정책들이 국내에 아무런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장개방은 언제나 보호받고 있던 취약산업을 일차적 피해자로 만들게 마련이다. 개방의 이득은 장기간 전 경제에 걸

시장의 개방, 각종 제도의 국제규범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세 과제이다. 생산성 증대라는 추상적 과제의 현실적 접근방안이 바로 이 세 과제를 성취하는 것이다. 우선, 시장개방은, 비록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의 첩경이다



쳐 시현되지만, 부담은 단기간에 국부적으로 나타나기에 정치적 부담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계층을 구제하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긴요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넘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사회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실제로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정치지도자 그룹이 이러한 과제들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해상충집단간 조화로운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leadership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면 생산성이 올라 갈 뿐 아니라 단기정책의 효과도 배증될 것이며, 이의 관건은 경제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겠다는

약속을 경제주체들에게 하는 것이다. 경제 문제에 손쉬운 해결책은 없다.

복지지출을 늘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누구나 희망할 것이나, 그 방안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또한 수혜자가 영원한 수혜자로 남지 않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방안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기업의 가장 큰 관심인 노사관계가 최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한층 성숙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는 250여개의 로드맵을 이미 작성해 놓았고, 그 철학과 주요내용은 재정경제부의 주관아래 KDI에서 『역동과 기회의 한국』이라는 보고서로 요약해 놓았다. 이제는 이를 실천에 옮길 시점이다. ●